

분야	캠페인	사회문제	주요 전략, 전술	결정적 계기
정치	낙천낙선운동	정치지체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과 증오를 받고 있던 상황.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부패경력, 반개혁 의정활동 등)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 명단을 발표하여 이들의 공천탈락과 낙선을 유도	시민운동의 성장과 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려고 하였으나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놓은 결과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반성
	국민참여재판 도입 캠페인	헌정 역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여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짐.	모의 배심재판 이에 참여한 이들의 경험기와 방청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	2003년 대법관 임명 제청 파동으로 사법개혁 분위기가 고조
	후보자정보공개운동	정책선거가 잘 촉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	온라인으로 다양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웹사이트 '3분 총선'을 제작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죽은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 이후 청소년들의 사회운동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함.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모의투표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 ¹
	공수처 설치 캠페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동안 4천 5백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구속되었지만, 뇌물을 준 재벌 총수들은 액수를 축소하거나 부정하였고 대부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	입법을 강제하기 위한 100만인 거리 서명운동 ² , 검찰의 부실수사를 모니터링해 폭로	우병우 검찰 소환 모습 vs 조국 사태

¹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21대 총선부터 만 18세 선거권이 적용되었다. 글이 작성된 시점이 2018년이라 실제로 법개정에 성공한 시기 1, 2년간의 활동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티핑포인트가 실제로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² 캠페인을 시작하던 때가 1996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지금처럼 간편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아니라 거리서명이다.

	성인지 예산 제도화 캠페인	2001년부터 지역의 주부들로 구성된 '민우회 생활 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임'이 주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활동이 있었음. 서울시와 도봉구, 양천구를 비롯하여 원주시, 춘천시, 고양시, 김포시, 인천시, 진주시, 광주 북구 등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지역 여성운동의 구체적 예산분석 활동 전국 단위 여성단체의 법제화 운동과 선거 시기 정책공약 제안 활동	17대 국회 들어 이전보다 늘어난 여성 국회의원
경제	소액주주캠페인	편법으로 재산과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한국 재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재벌을 개혁하는 것에 한계가 드러남.	주주대표소송	1997년 외환위기는 한보그룹의 부도로 촉발되었는데 이 한보그룹에 제일은행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어 은행 부실 문제가 심각해짐.
	통신 요금 인하 캠페인	발신전용폰이 생겨난 이래 이동통신 시장은 재벌·대기업들의 단말기 시장 장악, 통신 서비스의 담합과 폭리, 소비자 기만으로 지금까지 바람잘날 없음.	모니터링과 정보공개 청구 공익 소송과 관련법 개정 청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서명운동 등	참여연대에서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회복 운동 시작
	반값 등록금 캠페인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통해 등록금 책정을 정부의 권한에서 대학의 권한으로 이양. 그 결과 대학 등록금은 폭등했고 가게에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	매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반값 등록금 집회	2010년 지방선거와 재보선 패배를 경험한 한나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위기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문제가 굉장히 많은 형태로 추진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한해 2,4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반복적으로 시민재해가 발생	산재 유가족들이 투쟁 (단식, 농성)	2020년 1월 태안 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김용균 노동자 사망, 같은해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건설

				도중 화재로 38 명의 노동자가 사망 등 2020 년 이어졌던 산재사망사건
	청년 알바 노동권 캠페인	배달 노동자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트위터 시위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등 알바 노동권 관련 실태조사 단체교섭	2010 년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결성
	자활기업운동	빈곤층의 증가와 일시적 고용이라는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	자활기업 창업	2000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함, 2007 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사회	의료보험 개혁 캠페인	1989 년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었지만 조합주의 방식이어서 경제적 지급 능력에 따라 조합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특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은 반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은 많아서 농촌의 의료비가 너무 비싸지는 문제.	농민들의 직접행동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거나 불태우기, 공화당사 점거 등)	1994 년 4 월 노동, 농민, 시민, 보건의료 단체 등 총 77 개 단체와 6 개 지역연대회의가 모여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를 결성. 범국민연대회의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보험 적용 확대', '공평한 보험료 부담 달성'을 목표로 활동 (조합주의에 대해 사회적 연대와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 복지사의 중요한 사건)
	공부방 운동	1960 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빈민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방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1990 년대 들어 철거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개별화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지하 셋방으로 흩어지면서 빈민운동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	공부방의 설립과 제도화(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	서울지역 공부방 연합회 활동가들이 1995 년부터 1998 년까지 3 년여간의 워크숍을 통해 공부방의 위상을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삶을 가꾸어가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로 재정립. (이를 계기로 공부방 운동은 성인 중심의 빈민운동 흐름에서 나와 어린이·청소년을 주체로 한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사회교육 운동으로서 본격화.)

	GMO 표시 운동	한국은 매년 약 210 만 톤이 넘는 식용 GMO 를 수입하고,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 천만 톤의 GMO 농산물을 수입. 일본에 이어 세계 2 위이며, 이는 가구당 약 109kg, 1 인당 약 45kg 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	다양한 가공식품에 GMO 표시가 있는지 지속적인 실태를 조사해 발표	GMO 개발과 재배, 수입인증과 유통·관리, 표시제도, 안정성과 생태계 파괴, 종자 독점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패
	유치원 3 법 통과 촉구 활동	사립유치원 비리 만연	정보공개 청구와 비리 유치원 공개 비리유치원을 옹호하는 국회의원 인물별 시리즈물을 제작	2018 년 10 월 사립유치원 관계자 200 여 명이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 주최의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관련 정책 토론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제주 4.3 알리기 운동	제주 4.3 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사건. 2000 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2003 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졌으나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다크투어	(사)제주다크투어 창립
	1997 년 외환위기 아카이브 구축	1997 년부터 2001 년까지의 IMF 관리 체제는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촉발된 중요한 기점이었지만 대통령기록물에도 IMF 외환위기 사태와 관련 사후 보고서 이외에 발생 원인이나 대책 강구 등에 관한 보고서는 남아 있지 않음. 모든 문서들이 숨겨진 채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자료 비밀 해제 요청, 종이 문서 자료 수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들을 모아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 구축	외환위기 20 주년
인권	수요시위	다른 친구들과 달리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1991 년 김학순 선생 위안부 최초 증언과 뒤이은 여성들의 공개증언	1990 년 정대협 결성 1991 년 정신대 신고 전화 개설

		윤정옥은 1988 년 동시대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사회에 알리기 시작.	1992 년 1 월 8 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매주 수요일 낮 12 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요시위.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강제 이발, 체벌, 0 교시 새벽 등교, 성적표 게시, 막말과 공개적인 모욕, 대자보 붙였다며 징계 등 많은 학교에서 2000 년대 후반까지 실제로 일어났던 일.	주민발의 (당시 서울에서 주민발의가 성공한 사례는 '무상급식 도입'과 '서울광장 개방'에 관한 조례뿐), 의회 점거 농성	직선제로 바뀐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들이 잇따라 당선. 그러자 보수 세력들이 결집해서 극렬한 반발에 부딪힘.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급격히 후퇴할 위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	대체복무제 없는 징병제가 유지되며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고 있던 상황.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의 파병, 시위진압에 차출 등 한국군이 실제로 분쟁에 가담함.	병역거부 국제연대 대체복무 연구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의 등장 사법부의 무죄판결 유엔의 권고
	탈시설 운동, 시설폐쇄법 제정운동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8 년 1,527 곳에 이르며 전체 거주인 중 49.3%가 30 인 이상의 집단 시설에서 거주, 거주인 중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비율이 67%, 입소 기간이 10 년 이상인 사람은 58%. 1996 년 에바다 농아원, 2005 년 청암재단, 2006 년 성람재단, 2014 년 인강재단 등 거주시설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삼.	장애인당사자들의 탈시설 조직 지원단체들은 탈시설 모델을 연구하여 개인별 탈시설 정착 과정 지원 장애인들의 노숙농성	2002 년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조건부시설공대위' 조직
	낙태죄 폐지 운동	임신 중지 시술을 한 조산사와 의사들이 고발당하고 정부 역시	영화로, 팟캐스트로, 글로 그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임신 중지 경험에 대해 말하기.	2016 년 행정자치부가 전국 '가임기 여성 지도'를 제작하고 보건복지부가 임신 중지

		불법 '낙태'를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 여성들은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워졌거니와 병원비가 수백만 원대로 치솟았고 어떤 이들은 병원을 찾아 해외로 나가거나 시술해 주겠다는 걸 빌미로 한 범죄에 노출	위헌소송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위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며 처벌을 강화하려 함. 폴란드 '검은 시위'
	코로나 19 와 정보인권	한국의 방역 정책이 성공적이라 평가되고 있었으나 확진자의 동선 공개, 확진자가 머물렀던 곳 인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을 통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파악하려는 관행, 얼굴인식과 같은 신기술도 활용되면서 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문제로 떠오름.	공개 민원 제출, <코로나 19 와 정보인권> 보고서 발표 <코로나 19 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발표	코로나 19 인권 대응 네트워크 결성
환경	탈핵운동	한국은 1978 년에 첫 상업 핵발전소인 고리 1 호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핵발전을 시작했고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 문제와 함께 1980 년대 후반부터는 핵폐기물의 문제 또한 대두됨.	지역의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주민투표 공론장 구성	2004 년 부안군수가 군의회에서 부결된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강행하면서 부안핵폐기장반대운동이 일어남. 투입된 공권력의 규모나 투쟁의 역동성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반핵운동의 정점으로 꼽힘.
	보행권 회복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캠페인	1988 올림픽 이후 급속한 차량 증가, 하지만 법과 정책이 교통체증 완화만을 목적으로 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	보행권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고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보행권 신장을 위한 도심지 시민 걷기 대회, 교통사고 피해 가정 돕기 등)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등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태를 조사, 발표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낙동강 페놀사건 기업 불매운동	1991 년 3 월에 두산전자가 낙동강에 독극물인 페놀을 방류한	피해 신고 접수 수도세 납부 거부 운동	수돗물 페놀오염대책 시민단체협의회 결성

	사건 발생. 한국 페놀 허용치의 22 배, 세계보건기구의 허용치의 110 배까지 페놀수치가 올라감. 30 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20 일 만에 조업 재개. 그러나 조업 재개 2 주 후 2 차 유출 발생. 기업들의 안일한 환경 의식과 비윤리적인 기업 경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삼.	두산그룹 계열 상품 불매운동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 복구 캠페인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1 만 2 천 547 kℓ가 바다로 쏟아짐. 태안 앞바다는 물론 백사장, 인근 생물이 때죽음 당함.	방제 봉사활동 시민참여단(상부상조), 137 만여 명 참여, 하루 평균 7,821 명의 자원봉사자	기상악화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방제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 캠페인	2010 년부터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국립공원위원회가 2015 년 일곱 개의 부대조건을 걸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허락.	설악산 생태 경관조사와 무인 카메라를 통한 설악산 모니터링, 이를 바탕으로 각종 보고서의 조작, 누락 및 허위 기재 적발. 천막농성, 오체투지 및 도보 순례, 고공 시위 등 직접행동 낙천낙선운동	기존의 대응 단위를 확대, 종교계, 대학산악연맹을 비롯한 산악인들의 연대체, 동물단체, 환경운동 이외의 시민단체들을 조직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 결성
생협 운동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농사가 일반적이었던 한국의 농업 실태. 1976 년 풀무원 농장이 유기농업 시작. 친환경적인 방제법, 퇴비, 종자 개발, 재배 기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시장'이 없던 상황이 큰 문제로 대두.	농민, 종교, 여성단체 등이 도시-농촌 직거래 생협 설립 1997 년 IMF 전후에 지역 생협들의 경영 적자 문제가 크게 대두, 물류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통합을 모색하여 생협연합회 결성.	1986 년 한살림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을 처음 오픈.

